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성명]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날 짜 2016. 10. 19. (총 3쪽)

성 명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대화만이 사태해결의 실마리 국무조정실은 반헌법적 파업대응지침 해명하고 폐기해야

1. 공공부문의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퇴출제 정책 추진이 있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야당도 정부에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대결을 선택하고 강경대응이라는 기조만 고집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 등 이번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goo.gl/t3vE9o),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가 즉각 반헌법적인 파업대응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노동적인 대응을 모의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무부조차 불법으로 단정짓지 못하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이번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강호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임을 강조하였으

며,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야당 의원이 제시한 중재제안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노사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

3. 정부는 당장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파업의 시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었으며, 대화도 대안도 없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은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행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현재 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해 줄 것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지 오늘로 23일째이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철도노조, 국회, 시민사회계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끝.

■ 별첨자료 :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16. 9. 27.)

철도·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관계기관회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회의개요

- (時/所) ’16. 9.27(화) 07:30~08: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국무1차장(주제), 철도국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간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자부 기조실장

□ 회의내용

- (고용부)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필수유지업무 준수지도,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
 - 다만, 보충교섭, 중노위 조정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고용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은 임단협을 포함하고 있어 합법임
- (법무부) 이번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
 - 파업관련 동향 실시간 파악, 불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표명
- ⇒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
- (경찰) 운행방해, 불법시위 계획 등 사전입수, 대비 주력
 - * 노조에서 10.10일까지 집회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6일 이상 파업 각오 입장
- (국무1차장)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국내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신의직장)을 감안할 때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
- ⇒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